

올해 계육업계 어떤 일들이 있었나?



1. 3년만에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3년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나라가 떠들썩하다.

지난 11월 22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에 위치한 종계장에서 HPAI가 처음 발생했고, 이틀 후 27일 이 농장에서 3km 가량 떨어진 황등면 죽촌리 도촌마을에 위치한 종계장에서 추가로 발생해 방역당국은 물론 계육업계를 긴장시켰다.

HPAI 발생 직후 정부는 발빠르게 대처했다. 김달중 차관보 진두지휘 하에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의 방역조치가 진행됐으며, 1차 발생지역의 닭 1만3천3백수, 2차 발생지역의 닭 1만2천2백수를 모두 살처분 했다. 또 발생농장에서 달걀을 공급받은 전북 익산 소재 부화장 2개소에서 부화중인 종란(種卵) 600여만개와 이동제한 기간동안 위험지역(반경 3km) 안에서 생산되는 식용달걀을 모두 폐기했다.

그리고 당초 살처분 범위가 발생농가 500m 이내였으나 지난 11월 29일 농림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AI 발생 1, 2차 지역 반경 3km 이내 위험지역의 가금류 등을 살처분하기로 함에 따라 총 60농가 76만4천수의 닭이 살처분됐다.

2003년도에 이어 두 번째 AI가 발생하자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또다시 2003년도의 악몽을 재현해 내기 시작했다. 2003년도 살처분 자료화면과 외국의 생닭거래 장면, AI의 인체감염 확대 보도 등을 연일 헤드라인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더욱

이 익산교육청에서는 11월 28일 AI 발생 인근지역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귀가조치 또는 등교중단을 조치해 국민들의 불안감 조성은 물론 AI 발생으로 가뜩이나 고통받고 있는 육계사육농가 및 관련업계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 보도의 여파는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닭고기 소비저하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본회는 AI에 걸린 닭고기는 절대로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전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닭고기 안전성에 대해 집중 홍보했으며, 지난해 계약했던 AI 배상책임보험이 지난 11월로 만료돼 12월 1일 재계약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 한명숙 총리를 비롯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홍수 농림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각 시·도청 등 정부 관계자들과 의사, 검사, 경찰, 대학생, 일반 기업 등 각계에서 닭고기 소비촉진에 앞장섰다.

그러자 언론에서도 닭고기의 안전성 등에 포커스를 맞춰 기사를 보도해 소비자들에게 닭고기 소비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11월 28일 기준 AI 발생전 대비 50% 이상 감소했던 닭고기 소비량은 30%대까지 회복됐으며, 육계 가격도 kg당 600원대에서 12월 4일 현재 800원대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2. 육계자조금 사업, 연내 출범 무산

지난해 12월 23일, ‘육계자조금 사업 출범’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많은 준비 끝에 치러진 육계자조



금 대의원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많은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올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

지난 4월 20일 개최한 대의원 총회에서 의무자 조금 거출을 확정짓고, 각 품종별 거출금액을 결정지를 때만해도 연내 자조금사업의 출범은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이날 3개 축산단체에서 협의 추천한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안이 부결돼 희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 후 7개월여만인 지난 11월 21일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을 위한 세 번째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으나, 끝내 부결됐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는 3개 축산단체에서 협의 추천한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안 의결에 대해 선출된 대의원 135명 중 정족수 68명이 넘는 7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찬성 36명, 반대 36명으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다는 육계자조금활동자금대의회회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이로서 연내 출범시키려던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은 무산됐으며, 향후 일정마저 불투명하게 됐다.

3. 공정위, 닭고기 업계 과징금 부과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닭고기 등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본회 회원사 중 4개 업체가 부도에 빠지는 등 국내 계육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이에 본회와 회원사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2004년 3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총 25회의 모임을 갖고 도계수수료 인상(도계 150원/kg), 생닭의 원가

이하 판매 자제, 육계가격 하락시 도계량의 10~30% 비축 등을 협의한 바 있다(닭고기 제값 받기).

그러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제비용 현실화는 상대적으로 계열업체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제비용을 조정할 대신 원료구매가격을 시세에서 D/C해주는 생계D/C 관행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닭고기 제값 받기’는 제대로 실행조차 하지 못하고 실패, 종료하게 되었고, 더욱이 제비용 수준도 협의 이전 또는, 그 이하로 하락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5년 5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단이 본회와 본회 4개 회원사를 불시에 방문, 장장 6시간 넘는 시간 동안 본회 및 회원사에 보관 중인 각종 관계서류를 송두리째 카피해갔다.

문제는 업계의 ‘닭고기 제값 받기’ 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공동행위(담합)으로 간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부당행위’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그 후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올해 7월 19일 16개 업체중 4개사에 과징금 26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본회에 대해서도 생계의 산지별 거래가격 및 공급물량에 관한 정보 이외의 가격물량 정보의 게재와 고시를 금지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한 본회 16개 회원사 중 13개 업체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영향에 따른 특수상황, 농축산물의 수급조절 곤란 및 가격의 급등락 등 특성, 관련업체 및 사육농가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메이저 4개사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육계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곧 농축산물의 가격안정행위가 ‘담합행위’로 간주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육계사육농가를 비롯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 공산품과는 성격이 다른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축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극단적인 처사”라고 공정위를 강력히 비난하고, “가격안정대책을 위한 행위가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농축산물의 특수성이 법적으로 인정받도록 공정거래법상에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본회 및 16개 회원사는 지난 10월 2일 공정위의 심의의결 건(한국계육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닭고기 도계육 생산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삼계용 닭고기 생산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닭고기 육가공품 생산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4개 사건)에 대해 농수축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공산품의 시장경제논리로 공정위 규정을 적용한 부당성에 대해 지난 11월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4.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

지난 9월 25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와 관련 시행령이 공포됐다.

1차적으로 닭고기 포장유통 시행에 들어갈 일일 작업량이 8만수 이상인 도계장을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시행령·시행규칙(안)중 시행령에 부칙으로 8만수 이상의 도계장은 2007년 1월 1일부터 8만수 이하 및 가공장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본법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부칙을 삭제하고 일단 8만수이상 작업장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8만수 이상의 도계장들도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 시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포장작업을 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차 포장유통 대상 도계장 중 일부는 부분적이거나 어느 정도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냉각장치, 포장기계 선정, 그리고 막대한 시설비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차 시행에 예상되는 나머지 작업장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상황으로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준비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고, 상당수의 업체가 영세하여 시설비 조달 등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로 파생될 문제점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더욱이 법 제정 이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가 있었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되고 법부터 만들어진 것이 문제점을 낳은 원인으로 보여진다.

농림부 해당부처에서는 포장유통 미 이행에 대한 단속을 일정기간 유보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선행업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벌여 줄지는 현재로서도 유보적이다.

농림부는 지난 11월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세부 지침(안)을 만들어 관련 업계에 배포했으며,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다.

5. AI 인체감염 보도 항의 시위



2003~2004년에는 국내 발생한 AI으로, 2005년에는 국내 발생하지도 않은 AI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충격을 겪은 후 아직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올해 초.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기자회견을 했다.

AI가 창궐했던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4월 사이 가금류 살처분 등 방역에 참여했던 사람 중 4명에게서 AI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었다는 사

실을 거의 2년이 지난 후에 발표한 것. 그것도 국내에서도 아닌 미국의 질병관리센터(CDC)에 의뢰한 결과 '양성방응이 나왔지만 발병은 없었다'고. 자세한 보도를 접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사람이 HPAI에 감염됐다'는 막연한 소식만 전해들은 가금산업 관련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병력의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본회를 포함, 농협, 양계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AI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 항의 방문해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한 발표로 양계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1,600여명의 혈청 검사를 더 실시하고 닭고기 성수기인 6월에 AI 도상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양계산업을 포기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간주,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도상훈련 실시 취소결정을 내렸으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일을 진행키로 했다.

6. 육용 원종계 수입 급증

육용원종계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내년도 육계산업 불황이 예고되고 있다.

2002~2003년 육계업계는 생산과잉과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감소로 육계가격이 줄곧 생산비 이하로 형성돼 사육농가를 비롯 관련 업체들이 동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삼화육종, 한국원종, 하림 등 원종계 3사는 국내 육계수급 안정을 위해 2003년 11월 7일 원종계 수입량을 9만4천수로 유지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육용원종계 수입량은 D라인 기준 총 10만9천2백수로 원종계 쿼터량 9만4천수보다 1만5천2백수가 초과 수입됐다. 결국 시행 2년도 못한 채 원종계 수입 쿼터제는 깨지고 말았다.

올해 육용원종계 수입량은 12만7천수로 지난해보다 15%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계열업체의 원종계 사업 신규 진출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육용원종계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종계 생산 잠재력은 5백33만7천수이며,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16%가 증가한 6백24만4천수의 종계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는 살인적인 불황을 겪었던 2002년도의 생산잠재력(6백69만9천수)과 맞먹는 수치이다.

2002~2003년의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업계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7. 닭고기 소비량, 12년만에 쇠고기 추월

지난해 국내 인구 1인당 고기 소비량이 31.9kg을 기록, 3년만에 소폭 늘었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줄고 닭고기만 소비가 늘면서 1993년 이후 12년만에 닭고기 소비량이 쇠고기를 추월했다.

지난 2월 농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쇠고기는 31만7천톤, 닭고기 38만8천톤, 돼지고기 83만8천톤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인구 1인당 육류 소비량은 31.9kg을 기록했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02년 33.3kg을 정점으로 2003년 31.7kg, 2004년 31.3kg으로 2년간 하락세를 보여왔다.

육류별 1인당 소비량은 미국산 수입금지이후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해온 쇠고기가 2004년 6.8kg에서 지난해 6.6kg으로, 돼지고기는 17.9kg에서 17.8kg으로 각각 줄어든 반면 닭고기만 6.6kg에서 7.5kg으로 늘었다.

이는 선진국에서 나타난 백색육 선호 추세와 함께 미국산 수입금지 여파로 쇠고기 값 등이 비싸진 데 따라 대체수요가 닭고기로 몰리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